

국민의당 도의원, 더민주와 협치 강조

국민의당에 부의장 1명·상임위원장 최소 1명 '배분 반대' 결의 더민주 의원총회 의식한 것 분석

국민의당 소속 8명의 전북도의원들이 '협치 정치'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들은 1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 소속 전북도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협치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더민주 내부에서 국민의당 의원들과의 원구성에 있어 민주정치,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독선적인 일방통행을 감행하겠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그러나 국민의당 원내대표단이 구성된 만큼 원내 대표단 협의체를 통해 현명한 선택이 기대되고 이번 주 내로 협치 과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북 도민들의 정치에 대한 기대는 전북도민의 대변과 전북 발전에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전북도의회의 협치의 과정일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 이런 과정 속에서 전북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이 탄핵됐음을 전북도민들은 잘 알고 있다"면서 "기본선은 전북 정치 실효에 찬물을 끼얹는 더민주 행태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13일 국민의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통해 양용호(군산2) 의원을 원내대표로, 김중철 의원(전주7)을 원내부대표로 선출했다"며 "전북출신 국민의당 국회의원 10여명과 체면을 두텁게 하기 위해 서로라도 도민들의 염원을 무시하는 독단적인 처사가 있어서는 안될 것임을 엄중히



국민의당 소속 8명의 전북도의원들이 1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 소속 전북도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협치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고한다"고 압박했다.

도내 정치권은 이들의 '협치' 발언을 두고 최근 더민주의 의원총회를 의식한 것 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더민주 소속 전북도의원들은 지난 10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하반기 원구성을 위한 토론을 진행하고 표결에 부쳐 국민의당에 의정단 및 상임위원장을 배분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다.

이날 25명이 참여한 의정단 및 상임위원장 배분 투표에서 더민주 소속 도의원 14명은 배분 반대, 11명은 배분 찬성에 각각 표를 던져 결국 국민의당에 부의장 1명과 최소 1명의 상임위원장을 배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정과 부의장 2명, 상임위원

朴대통령, 국회 연설 키워드 '국민·경제·국회'

민생 중심의 국회 당부·국회와의 협력 강조... 구조조정과 노동개혁 등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가진 20대 국회 개원연설의 핵심 키워드는 '국민'과 '경제', '국회'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준비한 8,200여 자 분량의 개원연설에서 20대 국회의 개원을 축하하고 국정운영에 있어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구조조정과 노동개혁 ▲규제개혁 ▲창조경제·문화융성 ▲이러한 아프리카 경제외교 성과 ▲북핵 등을 주제로 연설을 이어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개원연설에서 20대 국회와 국민의 삶을 위한 민생 중심의 국회로 거듭나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국민'이란 단어를 34회로 가장 많이 사용했으며 '국회'는 세 번째로 많은 24회 언급했다.

국회와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화합(2회)', '정치(2회)', '상생(1회)', '협치(1회)', '소통(1회)' 등의 단어도 한두차례씩 사용했다.

박 대통령은 두 번째로 많이 언급한 단어는 '경제'였다. '창조경제'와 '세계경제', '지역경제' 등을 비롯해 총 29회 사용했다. 우리 경제가 처한 어려움과 강도 높은 조선·해운 구조조정의 필요성, 신시장 개척을 위한 경제외교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면서다.

또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에 따른 실효대책의 해법으로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개원식에서 주먹을 꼭 쥐고 연설하고 있다.

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추진 의지도 밝혔다.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의 통과도 당부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세계(19회)', '문화(16회)', '일자리(11회)', '구조조정(11회)', '미래(11회)', '규제(10회)', '개혁(8회)

등의 단어도 자주 언급됐다.

박 대통령의 이날 연설에서는 북핵 문제가 비중있게 다루졌다. '북한이 18회, 핵(核)이 15회 사용됐다.

박 대통령은 역대 가장 강력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독자적 대북제재가 나서서 등 그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가 강력히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핵화 의지가 없는 북한의 최근 대화 제의는 고강도 대북제재를 벗어나기 위한 국면전환을 위한 전술일 뿐이라고 일축하고는 대화를 위한 대화보다 강력한 압박만이 북핵 문제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못박았다.

박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오전 10시28분부터 10시58분까지 27분간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내내 차분하고 담담한 어조로 연설문을 읽어내려갔으며 연설 시작과 마무리시에는 넓은 미소를 띠고 고개를 숙여 의원들에게 인사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 중에 여러 차례 손동작을 사용했고 본회의장 좌우로 계속해서 고개를 돌리며 여야 의원들과 시선을 맞췄다. 아프리카 3개국 및 프랑스 순방에서의 피로누적으로 지난 5일 이후 일주일간 공식일정을 비운채 휴식에 전념해오던 지친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이성주 기자

도의회 행사위, 결산·예비비 승인 심사 기획관리실·자치행정국·공보관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3일, 제333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위는 회계운영 및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적정성과 건전재정 운영을 당부했다. 특히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의 효율성 강화와 자주재원 확보 대책 등을 주문하는 등 꼼꼼한 심사를 실시했다.

양성민 위원장(장수)은 "14개 사업에서 1,000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 시 미리 예산 조정해 도정 현안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강용구 의원(남원2)은 "동부권특별회계 이월액이 총 56억 가량 발생했다. 국비 미교부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이지만 매년 반복되고 있다. 동부권특별회계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예산에서도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철저한 분석을 통해 예산 편성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김중철 의원(전주7)은 "국비의 지연교부나 부족교부 사례를 사전 인지해 추경을 통한 감액 등 국고보조금 관련 사업에 대한 보다 철저한 예산운용이 필요하다. 또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송성환 의원(전주8)은 "병폐퇴직 수유에 축을 잘못해 부사업연임비와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사업 일부 예산을 불용처리했다. 이는 예산편성 시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보다 정밀하게 예산편성을 할 것과 불가피하게 발생한 예산은 추경에 미리 반영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달라"고 했다.

송지용 의원(완주)은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수요가 있을 경우 사용하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산 풍력발전소 교장 복구를 위한 지출결정일과 지출일 사이 약 3개월 기간이 소요되었는데, 시급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차후 긴급한 수요가 발생되었을 경우 사안이 시급성을 다루는 만큼 예산 집행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영규 의원(익산4)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집행잔액이 2014년 대비 약 470억 원 가량 증가하였는데, 여유자금 과다발생 방지와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기금의 본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남주 의원(비례)은 "예산뿐만 아니라 결산에 관한 사항도 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성평등 기본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고, 심의 결과 평가 의견서를 예·결산서에 첨부토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문했다. /신광영 기자

국민의당 김수민 진상조사단 공천 과정 수사 여부 놓고 이견

국민의당은 13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단(단장 이상돈)을 출범시켰지만, 조사단이 출범하자마자 벌써부터 당내에서는 조사 범위에 대해 이견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단장 이상돈 최고위원, 위원 박주현 최고위원, 김경진 김삼화 의원 등 총 4명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여기에다 추후 4인의 위원을 추가 인선한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선관위 고발 건에 대해서 우선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천 과정에 대한 수사에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송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일단은 진상조사단에 서 중앙선관위위원회 고발 사건에 리베이트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그 이후에 범위 확대 여부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공천 과정 수사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뤘다.

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모 언론사의 통화에서 "진상조사단은 선관위 고발 건에 대한 조사단"이라며 "이것을 넘어가는 조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공천 과정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동반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상조사단이 공천 과정까지 조사하느냐는 질문에 "전체를 다 조사하고 거기서 투명하게 말씀드릴 것"이라며 공천 과정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김경진 의원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단 가장 급한 부분은 리베이트 의혹부분에 대한 조사가 가장 핵심이고 첫 번째로 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부분인 것 같다"며 "그 다음에 어쨌든 공천과 관련된 부분도 하는 길에 같이 조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이성주 기자

박지원 '7번, 당선가능성 없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3일 김수민 의원의 비례대표 공천 과정과 관련, "공천심사를 하지 않고 7번에 배정된 것은 크게 주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통령 및 의정단 장당대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시 언론에서도 보도했지만 7번이 공천 대상 가능성이 있는 변호였느냐 아니었는지 모르며 이왕이면"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전략공천이나, 특히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서도 발표 공천도 많았다"며 "청년, 여성과 전문기술에 대해 (공천을) 신중하지 않더라도 당에서 발탁해서 공천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김 의원의 그런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이성주 기자

도시재생연구회, 오늘 전문가 초청 세미나

전북도의회 도시재생연구회(대표의원 최영일)는 14일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의 정책방향과 도시와 농촌 마을 재생 관련 정책과 현장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김현숙 교수(전북대)는 '정부 도시재생사업의 정책방향과 현황'이라는 주제로 그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현황과 최근 정부정책 변화내용 및 전라북도의 도시재생사업 현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100% 정부공모사업이다. 도내에서는 전주, 군산, 완주, 남원 등이 공모에 선정돼 사업을 진행 중이다.

고은설 대표(Art-Cluster 별의별)는 '창조적 장소 만들기'라는 주제로 마을주민과 함께 만드는 공간 재생 사례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제안한다.

신애숙 이장(진안군 원연장마을)은 평범한 농촌마을에서 커뮤니티 중심의 마을재생을 통해 우수마을로 변모한 노하우를 설명한다.

도시재생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최영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창)은 "전라북도 도시화율이 70%가 넘은지 오래로 시 단위는 물론이고 군 단위 역시 동농복합도시가 대부분으로 도민 대부분이 도시에 집중돼 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라북도 각 정부부처별 도시재생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도의회 도시재생연구회는 박재만 의원(국민의당 완주2), 이상일 의원(국민의당, 군산2), 한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임실), 백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주), 박재만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 장학수 의원(국민의당 정읍), 최은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신광영 기자

도의회 교육위, 예산의 효율적 배분 촉구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양용모)는 13일 2015년도 전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의를 통해 열악한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사용과 편성을 촉구했다.

이날 교육위 의원들은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집행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불용액 감소방안 등을 주문했다.

이해숙(전주) 의원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에 대해 "지난 2013년도부터 12%에서 2014년도 11.3%, 지난해는 10.8%로 지속적으로 납부율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도교육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 방안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정호영(김제) 의원은 "신설학교의 경우 학생 수에 맞게 학교시설의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노력이 부족해 결국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사용하지 못한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교육청 예산편성이 처음부터 일부는 부실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일부 시설 공사 사업의 이월로 시설실공무원들의 업무가 과부하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 시설비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현(익산) 의원은 최근 전남 신안 연호사 성곡행 사건을 두고 농산어촌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파악과 안전점검에 경찰서와 파출소, 방범대 등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주문했다.

황 의원은 "교육청의 최저가입찰제가 안전을 담보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학교 시설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다. 학생과 교직원 등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입찰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인정(군산) 의원은 "예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불용액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2차, 3차 추경을 거쳐 예산을 자연스럽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추경 전 예산 성립이 될 수 있음에도 곧바로 결산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관행임을 지적하며, 회계투명성과 적절한 예산변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양용모 위원장은 이날 결산심사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의거토록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일하자"고 의원들을 독려했다. /신광영 기자

정운천 '전북발전 위해 의정 활동 최선'

정운천(전주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국회개원과 함께 '전북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정 의원은 ▲통서회합을 통한 지역갈등 해소 ▲탄소산업, 금융산업, 새만금개발 등 전북미래산업육성 ▲기업유치 환경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의정 활동을 집중할 예정이다.

그는 "전북과 경북은 이미 탄소산업, 새만금고속도로 등 힘을 하나로 모을 때 두 지역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상황이어서"고 진단하면서 "호남의 지역간격을 해소하기 위해 석해울레 도입 등 정치개혁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이 30여년의 낙후 속에 지역 산업이 낙후된 만큼 탄소산업, 금융산업, 새만금개발 등을 앞당겨 100년 미래 걸거리를 창출하는데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삼성 MOU 사태에 대해 "전북이 먼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들이 전북을 찾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도내 여야 정치권과 전북도 그리고 노동자 등이 참여하는 여야노동 기업유치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신광영 기자

